

전국민 애태운 한달 실종...생활고로 안타까운 극단선택

사건사고로 되돌아 본 광주·전남 2022

2 조양 일가족 사망

지난 여름,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다면 일가족 3명이 행방불명됐다. 초등학생 딸을 포함해 일가족이 탄 차량은 완도군 송곡선착장 앞바다 인근에서 가라앉은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조모(10·5학년)양 가족은 지난 5월 중순 조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넘도록 사라졌다.

예정된 등교일이 지났는데도 조양이 돌아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낀 학교 측 관계자가 조양의 집을 찾아갔다. 아파트 우편함에 각종 미납·독촉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자 수상함을 느낀 학교 측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완도군 신지면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인근 펜션 CCTV에서 조양 부모가 힘없이 축 처진 팔을 입고 펜션을 나서는 장면을 확인했고,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도 신지면이었다.

결국 수색 6일 만인 29일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바닷속에서 조양 가족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조양 가족 시신 3구의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우울증을 갖고 있던 조양의 부모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건으로 관할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양 가족은 생활고로 지원이 절실했으나 정작

체험학습 신청한 뒤 사라져 수색 6일만에 완도 바다속에서 차량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자녀 살해·복지 사각 사회 이슈화

관할 지자체의 위기가구 대상자 명단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양의 아버지는 컴퓨터 판매 관련 자영업하던 중 지난해 폐업했고, 어머니도 그 무렵 일을 그만두고 1년간 무직 상태였다. 집 우편함에는 청구서와 카드대금 독촉장 등이 쌓여있었으며 현관 문에는 법원 특별우편 송달을 안내하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조양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지자체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양 가족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회복되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다시 어려움이 닦혔을 때는 또다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다.

본인 신청 외에도 주변인의 신고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도 한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미납돼 독촉장이 집 앞에 쌓여있거나 아이의 상태에 이상함을 느낀 교사가 신고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조양 가족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던 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던 점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힘들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지자체가 개인정보인 병원 진료 내역을 알 수 없어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을 갖고 있던 정황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10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긴장보급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면서 "대책을 도모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했다.

조양 부모의 결정에 죄 없는 조양까지 숨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만으로 생명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행법에는 부모 등 친족 손익사함을 살해하는 경우 '존속 살해'로 가중처벌되지만 자녀·손자 등 친족 손익사함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정서(58)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녀살해를 일반적 살인사건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속살해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지 파악도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어린 자녀들에게 행하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빠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양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뒤 대상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민행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시 소방본부 소방관이 21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서 소화전 연결을 방해하는 차량의 유리를 강제로 부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 소방본부 제공>

광주소방 긴급 출동 방해 주정차 강제집행 훈련

광주시 소방본부는 21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골목에서 불법 주정차 강제집행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소방 긴급 출동 시 소방 활동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강제로 처분하는 훈련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훈련에는 소방자동차 등 차량 5대와 58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가정해 진행됐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훈련을 통해 ▲차량 강제 밀어내기 및 돌과 ▲소화전 인근 차량 강제 견인 ▲차량 창문파괴 후 소화전 점령 등을 연습했다.

소방관들은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정차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이 가능하다.

강제 처분된 차량 차주는 합법적으로 주정차한 경우에 한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광주지검, 올 마약 밀수 14명 구속기소

13명 불법체류 외국인

광주·전남 마약 밀수입 급증

검찰이 국제우편을 통해 로션용기·커피·초콜릿·속옷 등에 마약류를 숨겨 밀반입시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올해 총 8건의 외국인 마약 밀수사건을 직접 수사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40)씨 등 태국인 10명과 베트남인 3명, 한국인 1명 등 총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국제소포·택배 등을 이용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종마약인 아바(YABA)·MDMA 7만5623정, 케타민 1712g과 필로폰 47g 등 도매가 기준 1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명 중 내국인 1명을 제외한 13명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독일·태국·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된 마약을 소매가로 환산하면 총 43억 2000만원 상당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마약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재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션 용기의 내용물을 버리고 마약류로 채우거나 한알씩 포장된 초콜릿 제품에 포장재를 이용해 은닉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마진이 많이 남는 점, 온라인을 통해 쉽게 유통이 가능한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건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2명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2명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연구비 부당수령 광주교대 교수 해임은 정당”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광주교육대 교수 A씨가 광주교육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교육대는 감사를 통해 A교수의 직무관련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2020년 7월 A교수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2배(336만원)를 의결했다.

A교수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교육원 미술반 강사들이 KTX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소유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표를 취소해 놓고도 영수증으로 교통비를 대리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의료 지급 근거가 되는 감사출감부 관리지도교수의 업무가 아님에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강사들의 서명을 출감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상당액을 환불했고, 팀티칭 수업을 위해 강사를 추가로 투입했으며 강의운영은 교수의 재량범위 내”라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강의와 관련한 폭넓은 재량을 가진 대학교수의 변칙적이고 부당한 강의 방지를 위해서도 A교수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